

한국리서치 월간리포트

여론속의

여輿론論

2018. 03

한국리서치 월간리포트

- 한국리서치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체 조사입니다.
- 매월 정해진 기간에 시행하는 정기조사입니다.
- 특정 의제를 다각도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심층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의 현상과 함께 흐름을 추적하고, 여론 속의 민심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 현안조사-국정지표-기획조사 등으로 구성합니다.
- 현안조사는 한국리서치 전문 연구원이 기획하고 분석하며, 개별적인 문의에 대해 상시적으로 소통합니다.
- 국정지표는 해당 조사결과와 함께 추이를 제시합니다.
- 기획조사는 분야별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기획하고 분석 및 보도를 함으로써, 여론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에디터들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운영책임

박종선 수석부장

전화 | 02-3014-0085
e-mail | have21c@hrc.co.kr

기획조사

정한울 여론분석 전문위원

전화 | 02-3014-1057
e-mail | hw.jeong@hrc.co.kr

국정지표

오승호 차장

전화 | 02-3014-0167
e-mail | shoh@hrc.co.kr

목 차

CONTENTS

주요 조사결과	4
1. 현안 조사: 미세먼지	8
2. 국정지표	17
1) 대통령 국정운영평가	18
2) 대통령 리더십 평가	20
3) 국가 경제 인식	21
4) 국가 안보 인식	23
5) 갈등 인식	25
3. 기획조사: 세월호 4주기 안전재난 인식 진단	26
4. 조사개요	36

2018년 3월 주요 조사결과

01

현안조사 : 미세먼지

- 삼한사미(三寒四微)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우리 국민은 이번 겨울을 미세먼지와 힘겹게 보내야 했습니다. 미세먼지와 더불어 봄이 되면서 황사까지 가세하여 우리나라 대기질은 더욱 악화된 상황입니다.
- 정부는 3월 27일부터 초미세먼지(PM2.5)의 환경기준을 일평균 $50\mu\text{g}/\text{m}^3$ 에서 $35\mu\text{g}/\text{m}^3$ 로, 연평균 기준을 $25\mu\text{g}/\text{m}^3$ 에서 $15\mu\text{g}/\text{m}^3$ 로 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강화 기준을 2017년 측정치에 대입하면 예보등급 '나쁨' 일수는 12일에서 57일로, '매우 나쁨' 일수는 0일에서 2일로 각각 늘어난다고 합니다. 앞으로 미세먼지 예보등급 '나쁨'이나 '매우 나쁨' 일수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 한국리서치는 우리 국민들은 미세먼지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대처하고 있는지, 생활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전망과 정부의 대처에 대한 평가를 확인하였습니다.
- 우리 국민 10명 중 9명은 미세먼지가 '심각하다'고 인식하여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미세먼지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중국 등 주변국의 영향(76%)'을 꼽았으며, 다음으로 '경유차 등 자동차 배기가스(12%)'를 지목하였습니다. 앞으로 미세먼지 문제는 거의 절반이 '나빠질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한편, 미세먼지는 우리 국민의 일상생활도 바꿔 놓고 있습니다. 실외보다는 실내활동 증가(90%), 마스크를 착용(68%)하고, 공기청정기를 구입하여 실내 공기를 관리(46%)하거나 의류관리기 또는 건조기를 구입하여 미세먼지를 제거한다(12%)는 응답도 국민 10명 중 1명 꼴로 나타났습니다.
- 미세먼지 예보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정확하다는 비율이 72%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미세먼지 해결에 대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는 68%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 미세먼지 문제는 전국민적 관심사로 자리잡아 생활양식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기질 관리를 위한 미세먼지 예보 기준을 강화하고, 정확한 예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보에 대한 정확성에는 국민들도 공감하고 있으나, 해결을 위한 노력은 부족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세먼지 문제는 악화될 것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입니다. 푸른 하늘 아래 미세먼지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도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국정지표 :

대통령 국정운영과 리더십평가, 경제/안보인식, 갈등인식

- 문재인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74%로 전월(69%)에 비해 5% 포인트 상승하였습니다. 1월 이후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40대 이상, 부산/울산/경남에서의 상승세가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리더십 평가에서는 6가지 항목 모두에서 잘한다는 응답이 전달에 비해 상승하였습니다. 평창올림픽을 전후한 한반도 정세 대응에 대한 평가가 반영된 결과로 이해됩니다.
- 경제인식 지수가 전달 -26에서 -27로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국정평가와 달리 경제 인식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대비 20대, 대구/경북, 학생에서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 국가안보 지수는 -4에서 +16으로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최근의 남북 해빙모드가 반영된 결과로 이해됩니다. 지난달 대비 60세 이상, 대전/세종/충청에서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 이번 달에는 추가적으로 갈등 인식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갈등 인식은 6개월에 한 번씩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주로 이야기 되고 있는 집단 갈등을 10개로 세분화하여 각각 물어본 결과, 아주 크다는 응답을 기준으로 여당과 야당(62%)의 갈등을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부유층과 서민층(57%), 진보와 보수(52%)간 갈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기획조사:

세월호 4주기 안전재난 인식 진단

- 한국사회를 충격과 눈물로 뒤덮게 했던 4.16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지 4주기가 다가옵니다. 무능했던 정부는 물론 우리 사회 전반의 시스템이 무기력했던 모습을 반성하며 대한민국의 역사는 “세월호 이전”과 “세월호 이후”로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 터져 나왔습니다.
- 이후 촛불과 탄핵을 거쳐 등장한 문재인 정부는 안전관리 및 재난관리의 국가책임체제를 정비하겠다고 다짐했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를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웠습니다.
- 그러나 지난 4년간 우리 정부의 재난 대응능력은 얼마나 달라졌으며, 우리사회는 얼마나 세월호 이후 얼마나 안전해졌는지 의문입니다. 정말 달라진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앞으로 무엇이 달라져야 할까? 답을 찾기 위해 한국리서치는 3월 26일부터 30일까지 사회안전과 재난대응 전반에 대한 심층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 “세월호 이후” 4년이 지난 지금 국민 스스로 매긴 성적표로 보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재해에 여전히 취약하고 불안한 대응체제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안전문제를 정치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경향도 발견됩니다.
- 특히 갈수록 재난, 재해가 대형화, 복합화, 국제화되어 가고 있으며, 특히 최근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오염, 건강 위협, 사회 해체와 같은 새로운 개념의 위험요소들이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이러한 대형복합화되고 국제화된 재해,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대응능력은 물론 민-관 통합적 대응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나서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자원과 역량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민간 시민사회의 모습에 대해서도 자성의 메시지가 감지됩니다.
- 카트리나 태풍,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빠르게 대형복합재난과 신개념 재난 대응을 위해 통합적인 대응체제를 갖춰나가는 미국, 일본과 달리 우리는 7시간 논란에만 머물러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달라진 대한민국으로 가야 할 길이 아직은 멀어 보입니다.
- 기획조사 결과를 보다 널리 공유하기 위해 이번 호부터 보고서 발간 전 <한국일보> 주말판 #플립란에 격주로 미리 보는 <여론 속의 여론>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합니다. 이번 호는 한국일보 2018년 4월 7일 토요일자 21면 “세월호 이후 재난대응 체계는... 진보 59% 개선됐다, 보수 69% 그대로다” 라는 제호로 전면에 게재되었음을 밝혀드립니다. 격주로 귀중한 지면을 할애해 준 한국일보에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응답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여론속의
여輿論論

CHAPTER

01

현안조사

01

현안조사 : 미세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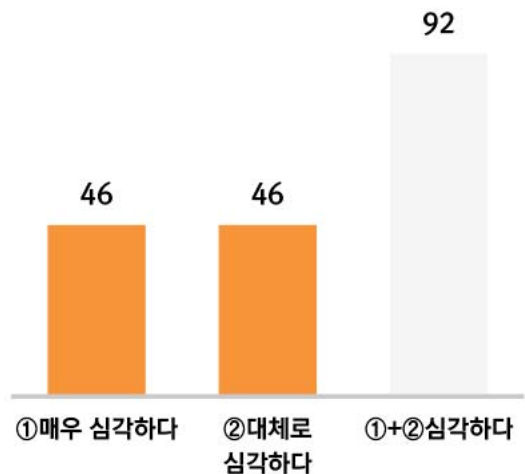
미세먼지문제에 대해
국민 10명중9명은
심각하게 인식

거주지역의 미세먼지 심각성에 대해 심각하다 92%, 심각하지 않다 7%, 잘 모르겠다 1%로, 심각하다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낮게 나타났다. 특히 매우 심각하다는 인식이 46%에 이르고 있다(대체로 심각하다 46%).

성별, 연령별로는 심각하다는 인식의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지역별로는 상대적으로 차이가 나타났다. 서울(98%)과 인천/경기(97%) 수도권 지역과 대전/충청/세종(94%)에서 심각하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Q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미세먼지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세요?

(N=1,000, %)



(단위: %)

Base=전체	사례수 (명)	① 매우 심각하다	② 대체로 심 각하다	①+② 심각하다	③ 별로 심각하지 않다	④ 전혀 심각하지 않다	③+④ 심각하지 않다	모르겠다	계
☐ 전체 ☐	(1,000)	46	46	92	7	1	7	1	100
거주지역									
서울	(195)	66	33	98	1	0	1	1	100
인천/경기	(300)	59	38	97	2	0	2	2	100
대전/세종/충청	(105)	43	51	94	5	0	5	1	100
광주/전라	(102)	37	49	86	13	1	14	0	100
대구/경북	(102)	25	62	87	10	0	10	3	100
부산/울산/경남	(155)	23	59	82	16	1	17	1	100
강원/제주	(41)	15	65	80	15	5	20	0	100

전국민적 관심사로 자리잡은 미세먼지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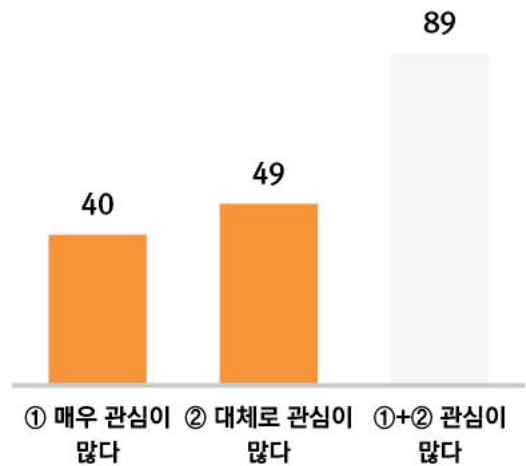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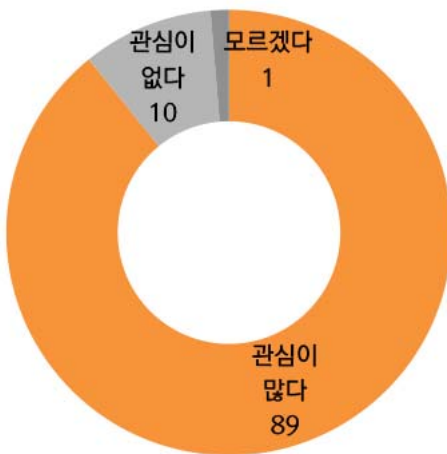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도는 관심이 많다 89%, 관심이 없다 10%, 잘 모르겠다 1%로, 미세먼지가 전국민적 관심사로 자리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우 관심이 많다는 응답이 40%에 이르고 있다(대체로 관심이 많다 49%).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도는 30대(94%), 직업별로는 자영업자(93%) 및 주부(94%)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영유아 자녀를 키우는 30대와 가족의 건강에 관심이 높은 주부, 날씨에 민감한 자영업자의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Q 미세먼지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으세요?

(N=1,000, %)



(단위: %)

Base=전체	사례수 (명)	① 매우 관심이 많다	② 대체로 관심이 많다	①+② 관심이 많다	③ 별로 관심이 없다	④ 전혀 관심이 없다	③+④ 관심이 없다	모르겠다	계
☐ 전체 ☐	(1,000)	40	49	89	9	0	10	1	100
연령									
19~29세	(175)	38	45	83	12	1	13	4	100
30~39세	(173)	43	51	94	6	0	6	1	100
40~49세	(203)	44	47	91	8	0	8	1	100
50~59세	(201)	37	53	90	9	0	9	0	100
60세이상	(248)	40	48	88	11	0	11	1	100
직업									
농/임/어업	(25)	20	68	88	12	0	12	0	100
자영업	(133)	38	55	93	7	0	7	0	100
판매/영업/서비스	(88)	29	59	87	9	1	10	2	100
생산/기능/노무	(107)	28	52	81	16	1	17	2	100
사무/관리/전문	(186)	44	48	92	8	0	8	1	100
주부	(242)	54	40	94	5	0	5	0	100
학생	(67)	35	51	86	10	0	10	5	100
무직/퇴직/기타	(154)	37	45	83	15	0	15	3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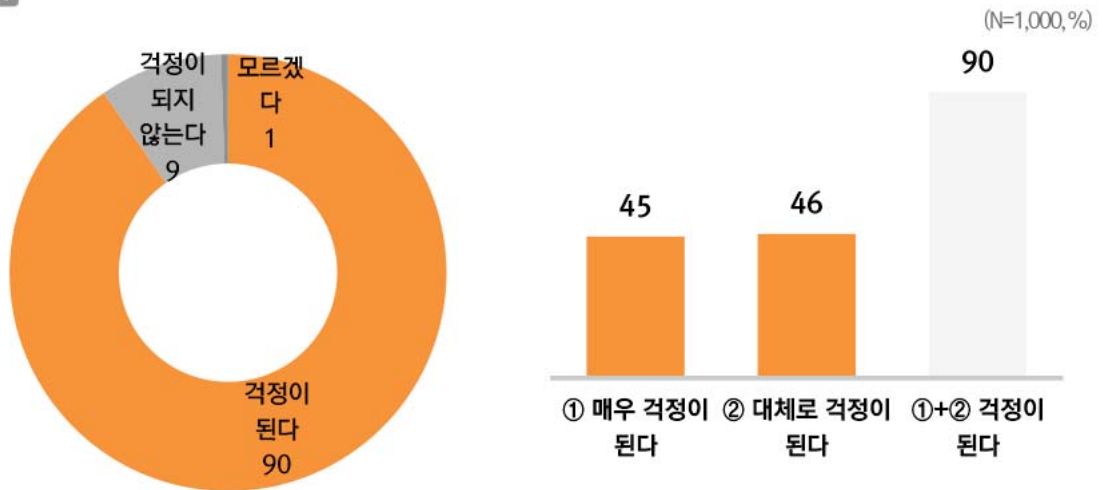
**미세먼지로 인해
건강이 매우 걱정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큰 집단은
여성, 20대, 서울 거주자**

미세먼지 문제로 인한 건강 걱정 정도는 걱정이 된다 90%, 걱정이 되지 않는다 9%, 잘 모르겠다 1%로, 미세먼지의 심각성, 관심도와 함께 건강에 대한 염려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우 걱정이 된다는 응답이 45%에 이르고 있다(대체로 걱정이 된다 49%).

미세먼지로 인해 매우 걱정된다는 염려는 여성(53%), 20대(51%), 서울 주민(55%)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Q 미세먼지로 인해 건강이 얼마나 걱정되시나요?



(단위: %)

Base=전체	사례수 (명)	① 매우 걱정이 된다	② 대체로 걱 정이 된다	①+② 걱정이 된다	③ 별로 걱정이 되지 않는다	④ 전혀 걱정 이 되지 않는 다	③+④ 걱정 이 되지 않는 다	모르겠다	계
☐ 전체 ☐	(1,000)	45	46	90	8	1	9	1	100
성별									
남자	(497)	36	51	87	12	1	12	1	100
여자	(503)	53	41	94	5	1	6	0	100
연령									
19~29세	(175)	51	36	87	9	2	11	2	100
30~39세	(173)	48	45	93	6	1	7	0	100
40~49세	(203)	49	41	91	9	0	9	0	100
50~59세	(201)	41	50	91	8	0	9	0	100
60세이상	(248)	37	53	90	9	0	9	0	100
거주지역									
서울	(195)	55	39	94	5	1	6	0	100
인천/경기	(300)	47	46	93	6	1	6	1	100
대전/세종/충청	(105)	39	54	92	8	0	8	0	100
광주/전라	(102)	45	42	87	13	0	13	0	100
대구/경북	(102)	37	50	87	12	0	12	1	100
부산/울산/경남	(155)	40	45	84	14	0	14	1	100
강원/제주	(41)	34	56	90	5	5	10	0	100

미세먼지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중국 등 주변국의 영향으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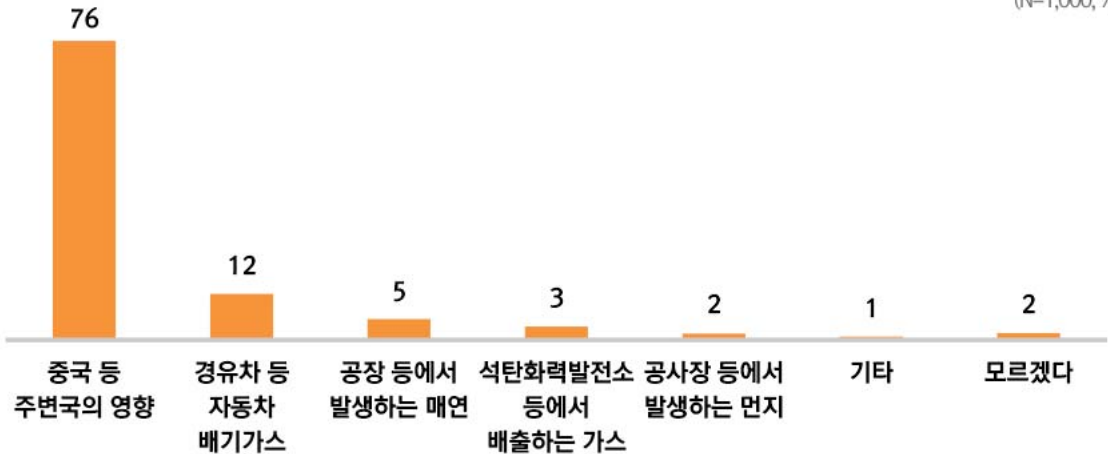
미세먼지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중국 등 주변국의 영향이라는 응답이 76%로 가장 높고, 이어서 경유차 등 자동차 배기가스(12%), 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매연(5%), 석탄화력발전소 등에서 배출하는 가스(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 등 주변국의 영향이라는 응답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으며, 서해안에 위치한 지역인 대전/세종/충청(80%), 광주/전라(8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경유차 등 자동차 배기가스라는 응답은 50대 이상 연령층(50대, 60세 이상 각각 19%)과 서울(14%), 부산/울산/경남(15%) 거주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Q 미세먼지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N=1,000, %)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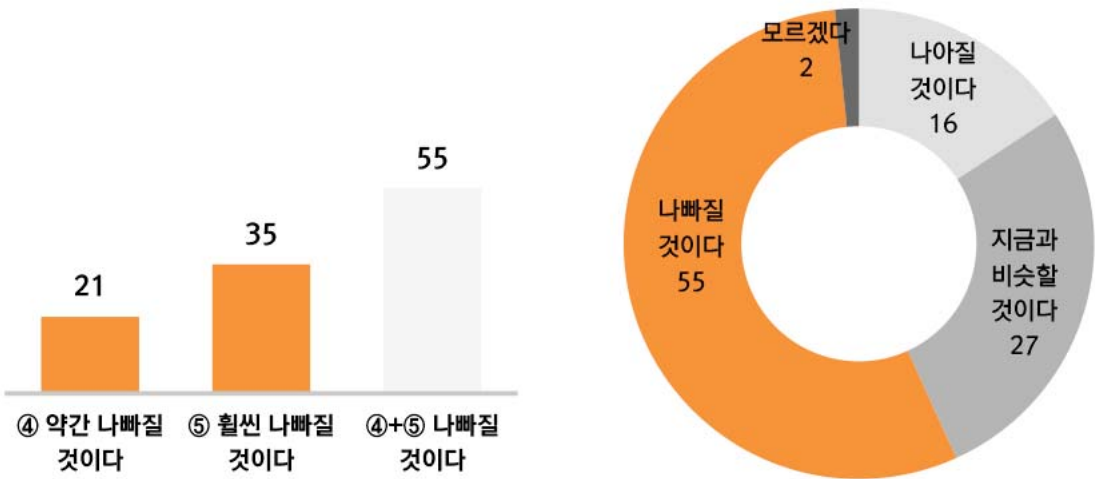
Base=전체	사례수 (명)	중국 등 주변국의 영 향	경유차 등 자동차 배 기가스	공장 등 에서 발생하 는 매연	석탄화력발 전소 등 에서 배출하 는 가스	공사장 등 에서 발생 하는 먼지	기타	모르겠다	계
■ 전체 ■	(1,000)	76	12	5	3	2	1	2	100
연령									
19-29세	(175)	87	2	2	2	2	1	4	100
30-39세	(173)	82	7	3	3	1	1	2	100
40-49세	(203)	75	7	9	5	1	1	1	100
50-59세	(201)	69	19	5	2	2	0	1	100
60세이상	(248)	69	19	6	3	1	1	1	100
거주지역									
서울	(195)	74	14	4	4	2	1	2	100
인천/경기	(300)	76	12	5	3	1	1	2	100
대전/세종/충청	(105)	80	6	3	7	3	1	1	100
광주/전라	(102)	80	10	5	2	1	0	2	100
대구/경북	(102)	76	8	10	3	1	1	1	100
부산/울산/경남	(155)	71	15	6	4	0	2	3	100
강원/제주	(41)	71	12	5	0	12	0	0	100

**우리 국민
2명 중 1명은
앞으로 미세먼지가
더 나빠질 것으로 전망**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전망은 나빠질 것이다 55%, 지금과 비슷할 것이다 27%, 나아질 것이다 16%, 잘 모르겠다 2%로, 우리 국민 2명 중 1명은 앞으로 미세먼지 문제가 더 나빠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훨씬 나빠질 것이라는 강한 부정 응답이 35%에 이르고 있다(약간 나빠질 것이다 21%). 미세먼지에 대한 부정적 전망은 여성(63%), 20대(67%), 서울(61%), 부산/울산/경남(65%) 거주자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현재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고려했을 때, 지금과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과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을 합하면 미세먼지에 대한 부정적 전망은 82% 수준에 이른다.

Q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문제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N=1,000, %)



(단위: %)

Base=전체	사례수 (명)	① 훨씬 나아질 것이다	② 약간 나아질 것이다	①+② 나아질 것이다	③ 지금과 비슷할 것이다	④ 약간 나빠질 것이다	⑤ 훨씬 나빠질 것이다	④+⑤ 나빠질 것이다	모르겠다	계
□ 전체 □	(1,000)	3	13	16	27	21	35	55	2	100
성별										
남자	(497)	4	14	18	32	19	29	48	2	100
여자	(503)	2	12	14	23	22	40	63	1	100
연령										
19~29세	(175)	3	6	9	18	23	45	67	5	100
30~39세	(173)	2	10	11	30	17	40	57	1	100
40~49세	(203)	3	13	16	32	22	29	51	0	100
50~59세	(201)	3	16	19	31	16	33	49	0	100
60세이상	(248)	2	18	20	25	24	30	54	1	100
거주지역										
서울	(195)	4	11	15	23	21	41	61	1	100
인천/경기	(300)	1	15	16	31	19	32	51	2	100
대전/세종/충청	(105)	2	12	14	32	23	30	53	1	100
광주/전라	(102)	5	16	21	30	22	23	45	4	100
대구/경북	(102)	2	18	19	23	16	39	54	3	100
부산/울산/경남	(155)	2	9	11	23	23	42	65	1	100
강원/제주	(41)	5	10	15	29	27	27	53	2	100

미세먼지로 인한 일기예보 확인의 일상화, 실내활동 증가, 마스크 착용 등 일상생활의 변화

미세먼지로 인해 일상생활의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한 결과, 미세먼지 예보 등 일기예보를 확인한다 90%, 야외활동보다는 실내활동을 더 많이 한다 78%,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한다 68%,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기 위해 공기청정기를 구입하였다 46%, 옷의 먼지를 털어내기 위해 의류관리기 또는 건조기를 구입하였다 12%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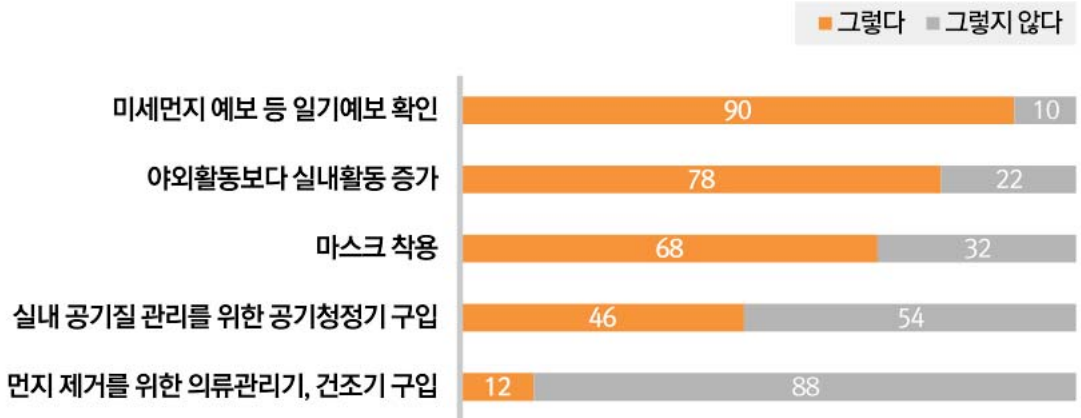
일기예보를 확인한다는 응답은 주부(96%)와 학생(9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30대 연령대에서는 야외활동보다는 실내활동이 증가(90%), 공기청정기 구입(60%), 의류관리기/건조기 구입(22%)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영유아 자녀를 위해 가전제품을 구입하여 활용하거나, 해당 연령대가 결혼 적령기임을 고려하였을 때, 공기청정기나 의류관리기/건조기 등이 혼수 품목 중 하나로 자리잡아 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한다는 응답은 여성(76%), 수도권 거주자(서울 77%, 인천/경기 74%)에서 높게 나타난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강원/제주 거주자(49%), 생산/기능/노무직 종사자(4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Q 미세먼지로 인해 다음과 같은 일상생활의 변화가 있었나요?

(N=1,000, %)



국민 10명 중 7명은 미세먼지예보가 정확하다고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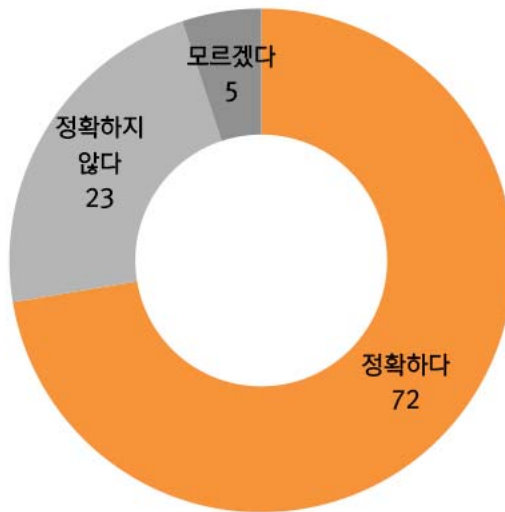
미세먼지 예보 정확성에 대해서 국민 10명 중 7명은 정확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정확하지 않다 23%, 모르겠다 5%로 나타났다.

정확하다는 응답은 수도권 거주자(서울 77%, 인천/경기 7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정확하지 않다는 응답은 대구/경북 거주자(29%), 강원/제주 거주자(32%)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Q 미세먼지 예보 정확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N=1,000, %)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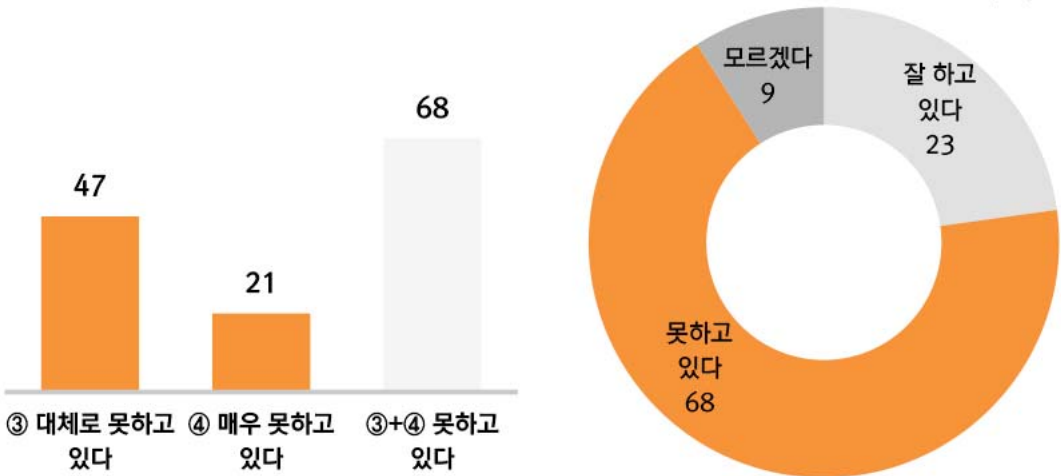
Base=전체	사례수 (명)	① 매우 정확하다	② 대체로 정확하다	①+② 정확하다	③ 별로 정확하지 않다	④ 전혀 정확하지 않다	③+④ 정확하지 않다	모르겠다	계
▣ 전체 ▣	(1,000)	3	69	72	21	2	23	5	100
거주지역									
서울	(195)	4	73	77	19	2	21	3	100
인천/경기	(300)	4	72	77	16	3	19	4	100
대전/세종/충청	(105)	1	65	66	24	1	25	9	100
광주/전라	(102)	3	70	73	23	0	23	4	100
대구/경북	(102)	2	64	66	27	2	29	5	100
부산/울산/경남	(155)	3	66	69	21	2	23	8	100
강원/제주	(41)	2	63	66	32	0	32	2	100

국민 10명 중 7명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한 평가는 못하고 있다 68%, 잘하고 있다 23%, 잘 모르겠다 9%로,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우 못하고 있다는 강한 부정 응답이 21%에 이르고 있다 (대체로 못하고 있다 47%). 정부의 노력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30대(75%), 대구/경북(74%) 거주자에서 상대적으로 높고, 매우 못한다는 응답은 20대(26%), 서울(26%)에서 상대적으로 높다.

Q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N=1,000, %)



(단위: %)

Base=전체	사례수 (명)	① 매우 잘 하고 있다	② 대체로 잘 하고 있다	①+② 잘 하고 있다	③ 대체로 못하고 있다	④ 매우 못하고 있다	③+④ 못하 고 있다	모르겠다	계
■ 전체 ■	(1,000)	1	21	23	47	21	68	9	100
연령									
19-29세	(175)	2	16	17	38	26	64	18	100
30-39세	(173)	1	13	14	52	23	75	10	100
40-49세	(203)	2	26	28	48	18	66	6	100
50-59세	(201)	0	28	28	47	18	65	7	100
60세이상	(248)	1	22	24	50	21	70	6	100
거주지역									
서울	(195)	2	20	22	44	26	70	8	100
인천/경기	(300)	2	22	24	47	21	68	8	100
대전/세종/충청	(105)	0	21	21	47	17	64	16	100
광주/전라	(102)	1	32	33	46	14	60	7	100
대구/경북	(102)	0	18	18	50	24	74	8	100
부산/울산/경남	(155)	1	17	18	49	22	71	11	100
강원/제주	(41)	7	22	30	49	12	61	10	100

담당자 정관철 부장

전화 | 02-3014-0753

e-mail | gcjung@hrc.co.kr

여론속의
여輿論論

CHAPTER

02

국정지표

02

국정지표

1) 대통령 국정운영평가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 70%대 회복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74%는 잘하고 있다고 한 반면, 19%는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 비율은 지난달 대비 5%포인트(69% → 74%) 상승하여, 3개월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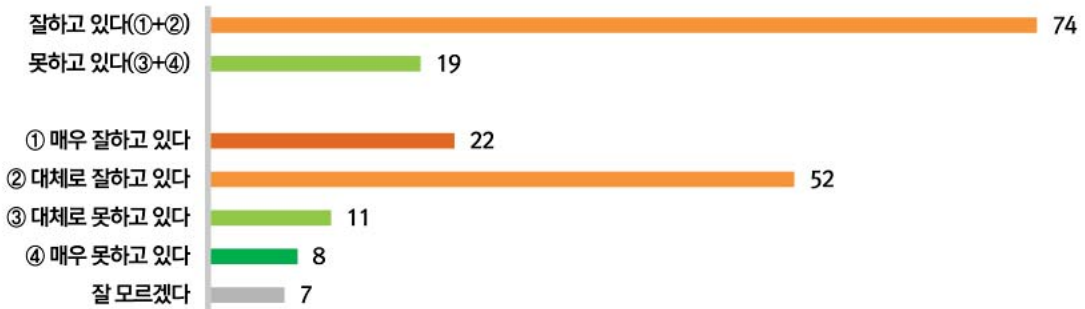
연령대별로는 20대 73%, 30대 81%, 40대 88%, 50대 76%, 60세 이상 58%이며, 40대와 60세 이상에서 지난달 대비 각 11%포인트 상승하여 상승폭이 컸다.

지역별로는 서울 74%, 인천/경기 76%, 대전/세종/충청 73%, 광주/전라 90%, 대구/경북 59%이며, 지난달 대비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상승하였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 93%, 중도 74%, 보수 51%로 지난달 대비 진보, 중도, 보수에서 모두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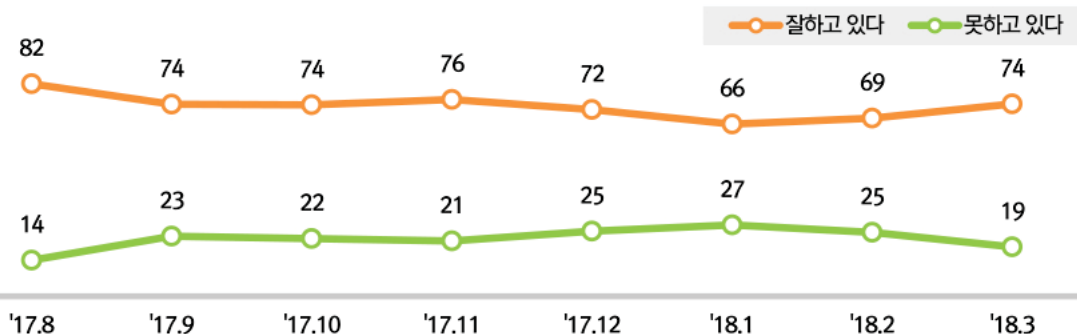
잘하고 있다 74%, 못하고 있다 19%

(N=1,000, %)



지난달 대비 5%포인트 상승, 3개월 연속 상승세

(N=1,000, %)



연령대, 거주지역, 이념성향별 국정운영 긍정평가 추이

지난달 대비 40대와 60세 이상에서 상승폭 가장 커

(N=1,000, %, %p)

	'17.8	'17.9	'17.10	'17.11	'17.12	'18.1	'18.2	'18.3	전월 대비
전체	82	74	74	76	72	66	69	74	+5
19-29세	88	86	83	87	85	67	74	73	-1
30-39세	90	89	85	86	92	77	81	81	0
40-49세	90	85	82	89	75	78	77	88	+11
50-59세	78	64	71	70	69	66	71	76	+5
60세 이상	68	54	54	54	47	48	47	58	+11

지난달 대비 부산/울산/경남에서 상승폭 가장 커

(N=1,000, %, %p)

	'17.8	'17.9	'17.10	'17.11	'17.12	'18.1	'18.2	'18.3	전월 대비
전체	82	74	74	76	72	66	69	74	+5
서울	80	73	69	77	68	60	68	74	+6
인천/경기	84	76	78	77	74	68	71	76	+5
대전/세종/충청	82	77	71	73	81	72	66	73	+7
광주/전라	91	91	82	86	93	84	85	90	+5
대구/경북	72	61	62	65	57	60	62	59	-3
부산/울산/경남	82	70	75	76	64	62	59	71	+12

지난달 대비 진보, 중도, 보수층에서 모두 상승

(N=1,000, %, %p)

	'17.8	'17.9	'17.10	'17.11	'17.12	'18.1	'18.2	'18.3	전월 대비
전체	82	74	74	76	72	66	69	74	+5
진보	95	93	92	92	89	88	88	93	+5
중도	81	77	75	79	75	70	73	74	+1
보수	65	50	50	52	51	41	47	51	+4

02

국정지표
2) 대통령 리더십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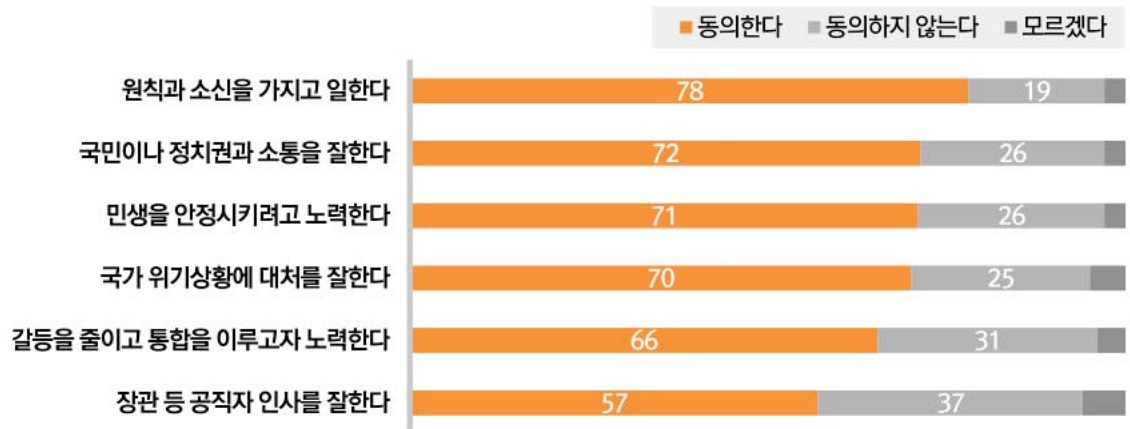
국가 위기상황
대처 항목에서 상승하고,
민생안정 노력 항목은 하락

대통령 리더십을 6가지 차원으로 각각 평가하게 한 결과, 원칙과 소신에 대한 긍정 평가가 7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소통(72%), 민생 안정(71%), 위기상황대처(70%), 통합노력(66%), 공직인사(57%) 순이었다.

리더십 차원별 평가 추이를 보면, 지난달 대비 6가지 차원 모두 긍정평가 비율이 상승하였다.

원칙과 소신에 대한 평가 가장 높고, 공직 인사 평가 가장 낮아

(N=1,000, %)



지난달 대비 모든 항목에서 상승

(N=1,000, 동의한다%, %p)

	'17.8	'17.9	'17.10	'17.11	'17.12	'18.1	'18.2	'18.3	전월 대비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일한다	81	76	77	77	75	72	72	78	+6
국민이나 정치권과 소통을 잘한다	81	72	75	72	72	69	68	72	+4
민생을 안정시키려고 노력한다	84	79	76	78	75	73	69	71	+2
국가 위기상황에 대처를 잘한다	68	58	59	72	66	59	62	70	+8
갈등을 줄이고 통합을 이루고자 노력한다	75	69	68	67	65	62	62	66	+4
장관 등 공직자 인사를 잘한다	58	50	49	54	51	52	51	57	+6



국정지표

3) 국가 경제 인식

국가경제인식지수 -27

국가경제에 대한 인식을 현재 상황 평가와 이후 전망으로 구분하여 측정한 뒤, 평가와 전망의 순 긍정 응답비율을 산술평균 하여 지수화(-100과 100사이의 값)하였으며, 이는 미국갤럽의 경제인식 인덱스(Gallup's U.S. Economic Confidence Index)를 참고하였다.

국가 경제 인식 지수는 -27로 지난달(-26) 대비 1포인트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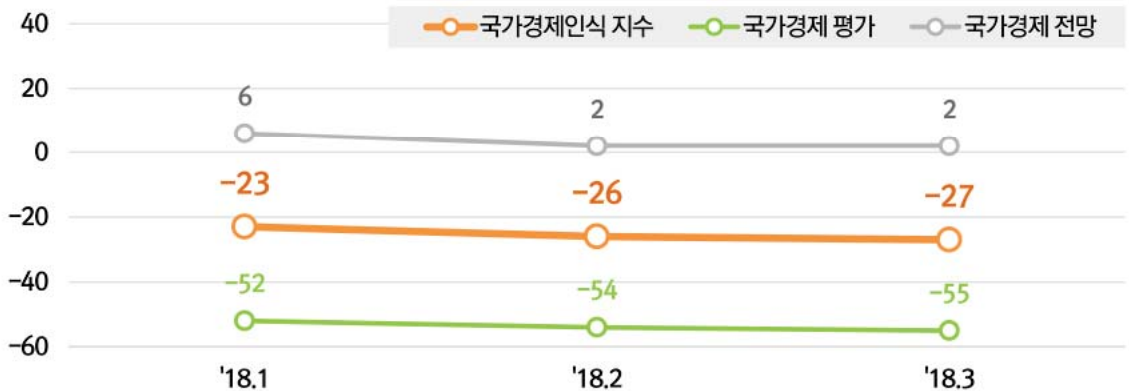
경제 인식 지수 산출 방식

(N=1,000)

우리나라 경제상황 평가	좋다 (a)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나쁘다 (b)	모르겠다	계	좋다-나쁘다 (a-b)
	7%	30%	62%	1%	100%	-55(A)
우리나라 경제상황 전망	나아질 것이다(c)	지금과 비슷할 것이다	나빠질 것이다(d)	모르겠다	계	나아질 것- 나빠질 것 (c-d)
	31%	38%	29%	2%	100%	2(B)
국가경제인식(지수): A와 B의 평균						-27

국가경제 인식지수 지난달 대비 1포인트 하락

(N=1,000, 포인트)



연령대, 거주지역, 직업별 국가 '경제' 인식지수 추이

지난달 대비 20대에서 하락폭 가장 커

(N=1,000, 포인트)

	'18.1	'18.2	'18.3	전월 대비
전체	-23	-26	-27	-1
19-29세	-25	-16	-20	-4
30-39세	-12	-20	-17	+3
40-49세	-12	-13	-16	-3
50-59세	-26	-29	-30	-1
60세 이상	-36	-46	-45	+1

지난달 대비 대구/경북에서 하락폭 가장 커

(N=1,000, 포인트)

	'18.1	'18.2	'18.3	전월 대비
전체	-23	-26	-27	-1
서울	-25	-25	-28	-3
인천/경기	-25	-27	-22	+5
대전/세종/충청	-22	-31	-23	+8
광주/전라	-4	-7	2	+9
대구/경북	-32	-31	-49	-18
부산/울산/경남	-22	-31	-44	-13

지난달 대비 학생에서 하락폭 가장 커

(N=1,000, 포인트)

	'18.1	'18.2	'18.3	전월 대비
전체	-23	-26	-27	-1
자영업	-31	-35	-37	-2
판매/영업/서비스	-24	-16	-23	-7
생산/기능/노무	-13	-22	-12	+10
사무/관리/전문	-19	-22	-15	+7
주부	-32	-35	-31	+4
학생	-10	-11	-30	-19
무직/퇴직/기타	-19	-27	-35	-8

02

국정지표
4) 국가 안보 인식국가안보 인식지수
+16

경제인식 인덱스와 동일한 방식으로 국가안보에 대한 인식을 현재 상황 평가와 이후 전망으로 구분하여 측정한 뒤, 평가와 전망의 순 긍정 응답비율을 산술평균 하여 지수화(-100과 100사이의 값)했다.

국가 안보 인식 지수는 +16으로 지난달(-4) 대비 20포인트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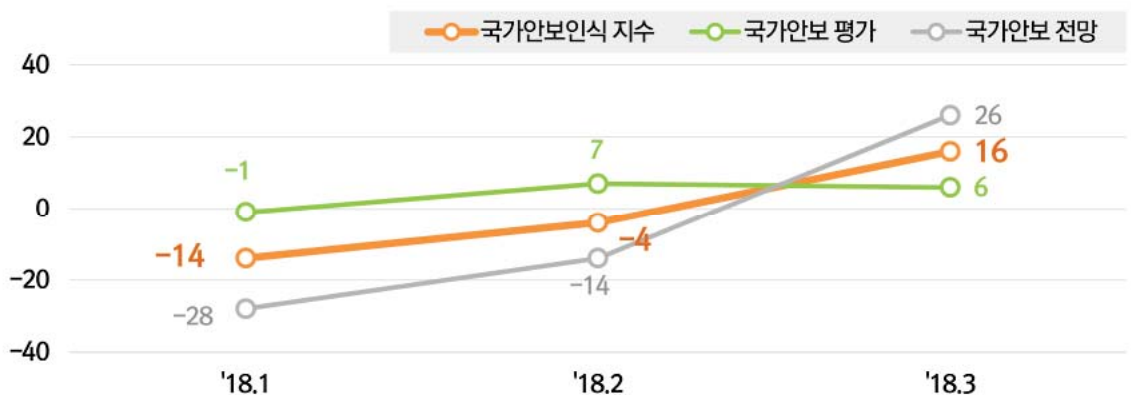
안보 인식 지수 산출 방식

(N=1,000)

우리나라 안보상황 평가	좋다 (a)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나쁘다 (b)	모르겠다	계	좋다-나쁘다 (a-b)
	34%	35%	28%	3%	100%	+6(A)
우리나라 안보상황 전망	나아질 것이다(c)	지금과 비슷할 것이다	나빠질 것이다(d)	모르겠다	계	나아질 것- 나빠질 것 (c-d)
	44%	34%	18%	4%	100%	+26(B)
국가안보인식(지수): A와 B의 평균						+16

국가안보 인식지수 지난달 대비 10포인트 상승

(N=1,000, 포인트)



연령대, 거주지역, 이념성향별 국가 '안보' 인식지수 추이

지난달 대비 60세 이상에서 상승폭 가장 커

(N=1,000, 포인트)

	'18.1	'18.2	'18.3	전월 대비
전체	-14	-4	+16	+20
19-29세	-8	+10	+18	+8
30-39세	+2	+9	+25	+16
40-49세	+3	+10	+36	+26
50-59세	-18	-1	+18	+19
60세 이상	-42	-37	-9	+28

지난달 대비 대전/세종/충청에서 상승폭 가장 커

(N=1,000, 포인트)

	'18.1	'18.2	'18.3	전월 대비
전체	-14	-4	+16	+20
서울	-24	-10	+15	+25
인천/경기	-14	-3	+23	+26
대전/세종/충청	-11	-13	+20	+33
광주/전라	+8	+24	+42	+18
대구/경북	-29	-5	-15	-10
부산/울산/경남	-11	-9	+4	+13

지난달 대비 진보, 중도, 보수층에서 모두 상승

(N=1,000, 포인트)

	'18.1	'18.2	'18.3	전월 대비
전체	-14	-4	+16	+20
진보	+16	+28	+51	+23
중도	-10	-6	+11	+17
보수	-52	-36	-20	+16

02

국정지표
5) 갈등 인식

여당과 야당,
부유층과 서민층,
진보와 보수간
갈등이 심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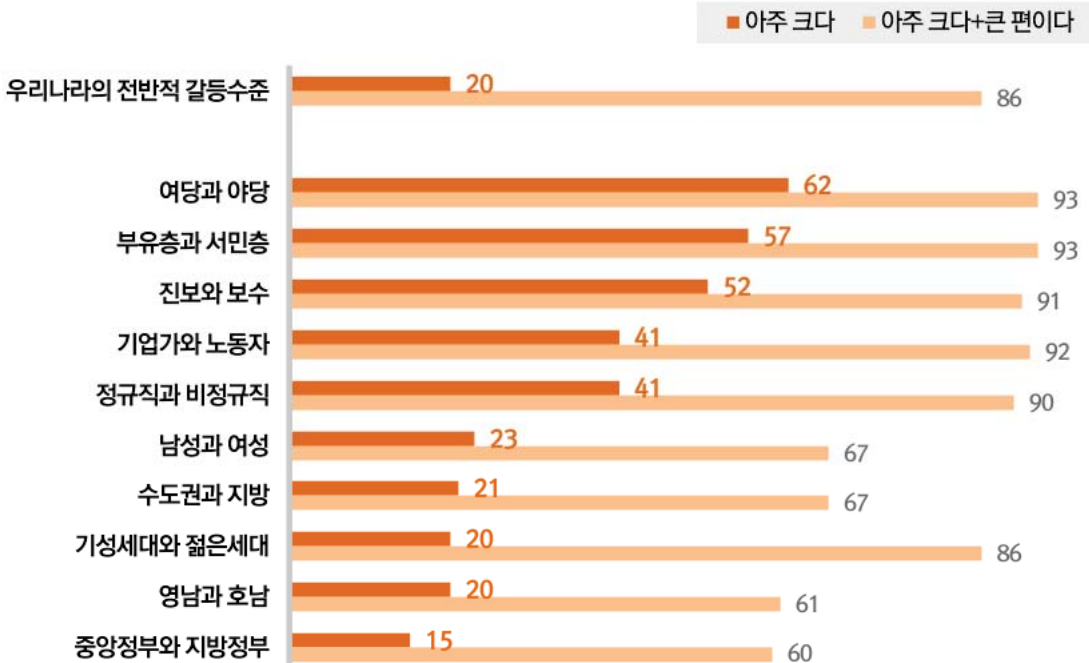
현재 우리나라의 갈등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갈등 수준 전반과 10개 집단별 갈등 정도를 4점 척도(아주 크다, 큰 편이다, 작은 편이다, 아주 작다)로 물어보았다.

그 결과 갈등이 크다는 의견이 다수인 가운데, 우리나라 10명 중 2명은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갈등 정도가 '아주 크다'고 평가하였다.

집단별로 보면 여당과 야당의 갈등이 '아주 크다'는 응답이 6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유층과 서민층(57%), 진보와 보수(52%), 기업가와 노동자(41%), 정규직과 비정규직(41%), 남성과 여성(23%), 수도권과 지방(21%), 기성세대와 젊은세대(20%), 영남과 호남(20%), 중앙정부와 지방정부(15%) 순이었다.

여당과 야당간 갈등이 가장 크다고 인식

(N=1,000, %)



담당자 오승호 차장

전화 | 02-3014-0167
e-mail | shoh@hrc.co.kr

여론 속의
여輿論論

CHAPTER

03

기획조사

03

1. 세월호 4주기, 우리 얼마나 달라졌나?

세월호 이후 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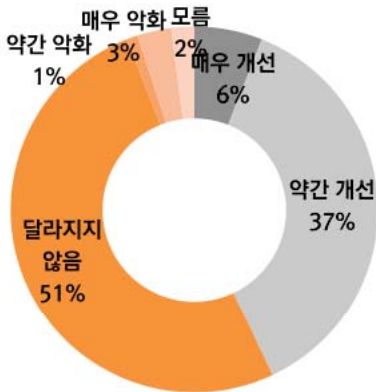
재난대응 “달라지지 않았다” 51%, “개선되었다”, 42% “대형재난 불안하다” 79%
재난대응 평가 진보 59% “개선되었다”, 보수 67% “달라진 게 없다”

세월호 이후 재난·재해 대응체제가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물어본 결과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는 답변이 51%로 과반이었다. ‘개선되었다’는 응답은 42%, ‘나빠졌다’는 응답은 4%에 그쳤다. 무엇보다 갈수록 대형사고로 터지는 재난사고가 불안하다. 우리 사회가 대형 재난으로부터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본 결과 ‘별로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이 64%였고, ‘전혀 안전하지 않다’는(15%) 응답까지 합하면 10명 중 8명(79%)이 불안하다고 답한 셈이다.

문제는 안전문제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여전하다는 점이다. 정부의 지시기반인 진보층에서는 59%(매우 11%, 약간 48%)가 개선되었다고 답하고, 반대로 보수층에서는 67%가 달라진 것이 없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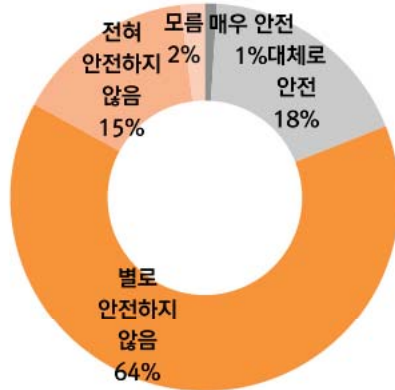
Q 세월호 이후 재난대응체제 평가

(N=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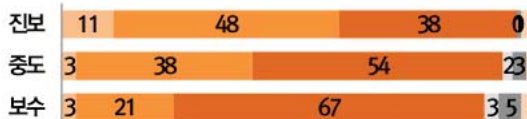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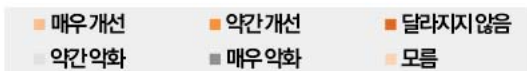


Q 대형재난에 대한 안전도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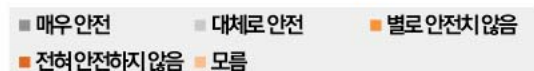
(N=1,000, %)



이념성향별 엇갈린 재난대응 평가



우리 사회 안전도 평가는 한목소리



03

2. 국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재난은?

자연재해에선 “지진”
사회재난에선 “화재”

지진 불안 85% 압도적, 가뭄/폭염(66%)>홍수/침수(64%)>태풍/강풍(61%) 순
화재(69%)>환경오염·가축전염병(67%)>붕괴사고·교통재난(66%)>
폭발사고(62%)>국가기반 시설 마비(60%)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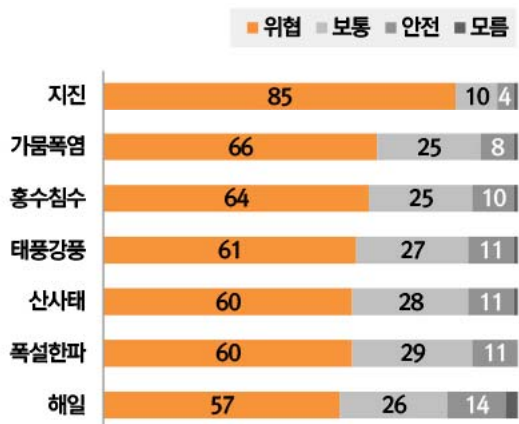
국민들이 우려하는 재난 요인에도 큰 변화가 감지된다. 정부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에서는 재난을 ‘자연재해’와 ‘사회재난’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자연재해 유형 중에서는 지진위험을 불안해 하는 응답이 85%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웃 일본의 문제로만 생각했던 지진이 이제는 연이은 경주, 포항 지진사태로 인해 대학입시까지 연기해야 했던 기억이 생생한 상황이다. 다음으로 우려되는 자연재해로는 가뭄·폭염(66%) 홍수·침수(64%) 태풍 강풍(61%)의 순이었다. 산사태(60%) 폭설·한파(60%) 해일(57%)을 위협으로 보는 여론이 뒤를 이었다.

한편 역시 ‘재난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재난 요인 중에서는 최근만 하더라도 제천화재 사건으로 적지 않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 처럼 끊이지 않는 화재사건에 대해 위협이 된다는 응답이 69%로 가장 높았다. 환경오염 사고에 67%, 가축 전염병에 67%가 불안감을 피력했다. 붕괴 사고나 세월호 사건 같은 해상재난, 항공사고를 포함한 교통재난에도 66%가 불안하다고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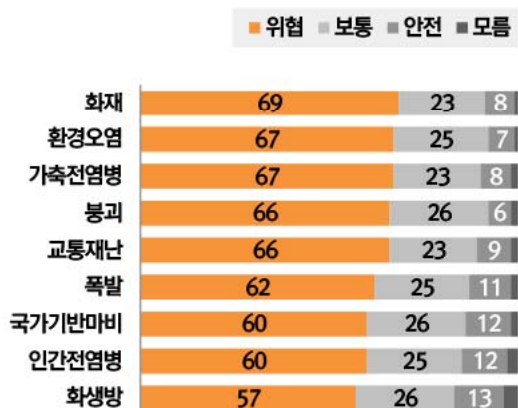
Q 자연재난 7대 유형별 위협인식

(각유형별 N=1,000, %)



Q 사회재난 9대 유형별 위협 인식

(각유형별 N=1,000, %)



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안(2018.1.18시행, 국가법령 정보센터)

03

3. 안전사회로 가는 길이 쉽지 않은 이유

① 신개념 위협 등장

지구생태위협 76% > 경제위협 69% > 사회해체 68% > 건강질병/기술재난 67%

원자력 방사능 61% 순

시급히 <재난안전법>에 포함시킬 신재난은? 지구생태 45% > 건강질병 39% > 사회해체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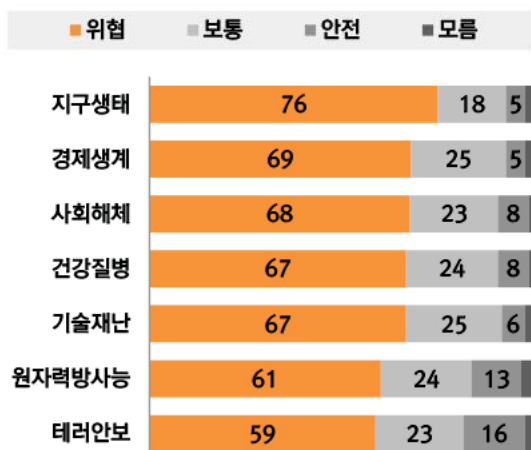
문제는 현재 '재난안전법'에 포괄되지 않는 "새로운 위험요인"들에 대한 불안감도 매우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신개념 안전위협 요인으로서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 '지구적 생태위협' 요인에 대한 우려가 가장 높아 76%에 달했다.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생계위협'이 69%, '약물중독, 학교폭력' 등 '사회 해체' 위험을 꼽은 응답이 68%였다. 각종 질병과 먹거리, 생명유리를 저해하는 '건강 위협', 사이버 재난 및 산업재해 같은 '기술재난'도 67%로 뒤를 이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은 방사능 유출사고'나 '테러'와 같은 비전통적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각각 61%, 59% 수준이었다.

'재난안전법'에 포함되어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는 기존 재난유형 못지 않게 새로운 재난요인들에 대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 신개념 위협 요인 중 '재난안전법'에 시급하게 포함시켜야 할 유형이 무엇인지 물어본 결과(1순위+2순위) '지구적 생태위협'을 꼽은 응답이 46%로 가장 높았고, '건강 위협' 39%, '사회 해체 위협' 30% 순으로 나타났다.

Q 신개념 재난 유형별 위협인식

(각유형별 N=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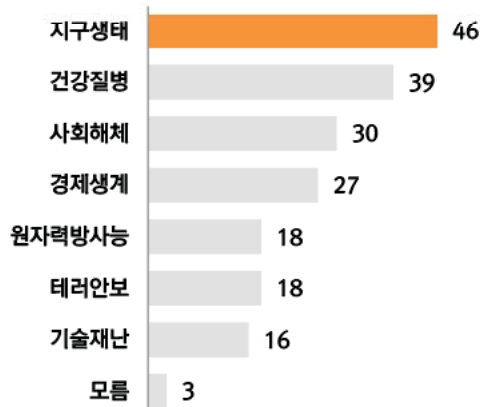
신개념 7대 재난유형별 위협 인식



Q <재난안전법>에 시급히 포함시켜야 할 위협

(중복응답, N=1,000, %)

<재난안전법> 포함의 우선순위 (1+2순위)



② 복합재난화 현상

자연재해가 사회재난으로
이어지는 대형복합재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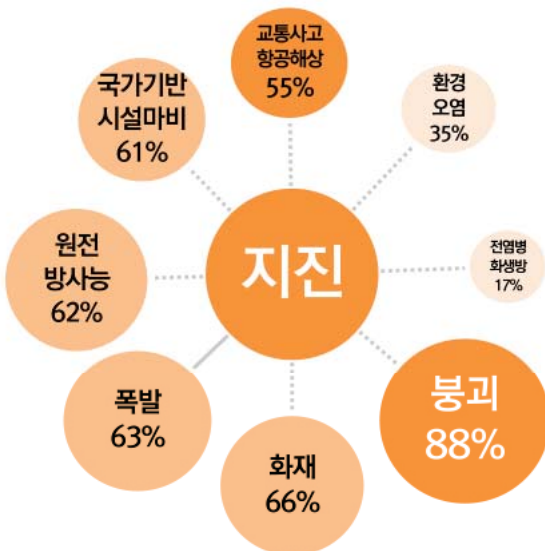
대형 복합재난 유형은 “지진”, 화재, 폭발, 원전사고, 국가 기반시설 마비 등 과 복합 우려
가물/폭염은 복합재난 가능성 낮은 유형

국내외적으로 하나의 자연재해가 복수의 사회재난으로 연결되는 복합재난화 현상이
심화되는 것도 풀기 쉽지 않은 숙제이다. 2005년 허리케인 커트리나가 도시기반시설의
붕괴로 이어지고, 2011년 센다이 지진이 후쿠시마 원전 유출로 이어진 사례가
대표적이다(한국행정연구원 2015).

국민들도 특정 자연재해가 발발할 경우 동시에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재난
형태에 대해 나름의 우려와 생각이 뚜렷했다. 가장 우려가 컸던 “지진 재해”에
대해서는 복합재난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재난으로 각종 붕괴사고(88%)나
화재(66%), 폭발(63%), 원자력 방사능 유출사고(62%), 국가기반 체제(에너지, 통신,
금융, 의료 등)의 마비(61%) 등 다양한 사회재난이 동시에 일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반면, 지진 다음으로 우려가 컸던 “가물/폭염” 재해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56%),
인간 감염병(52%) 등의 전염병과 환경오염 사고(45%)가 연결될 수 있다고 보고 다른
사회재난과 복합될 가능성은 별로 크지 않다고 보는 편이다. 자연재해의 성격에 따라
복합재난의 규모나 그 조합 구성이 달라짐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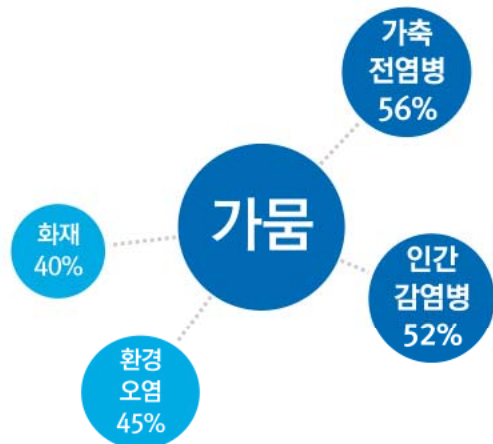
Q 복합재난 범위와 확률이 큰 재난유형: “지진”
(동시에 일어날 사회재난 유형 복수응답)

(복수응답, N=1,000, %)



Q 복합재난 범위와 확률이 낮은 재난 “가물/폭염”
(동시에 일어날 사회재난 유형 복수응답)

(복수응답, N=1,000, %)



③ 재난의 국제화

미세먼지 주범 “중국 등 주변국” 76%, 국내 요인 압도
국내 비상저감조치의 미세먼지 완화 효과 제한적

글로벌 재난 확산,
미세먼지”가 대표적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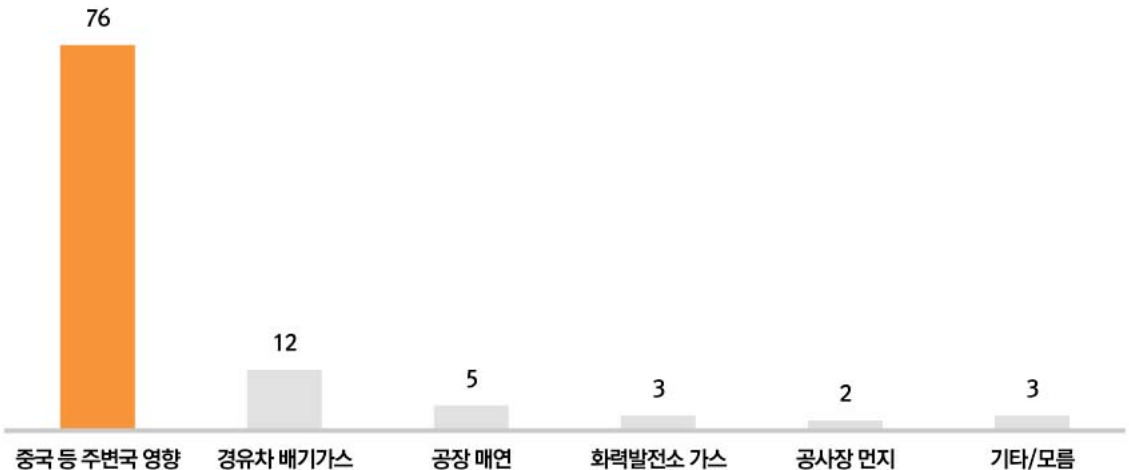
복합재난 못지않게 재난의 국제화 문제도 심각하다. 미세먼지 사례를 살펴보자. 지난 4월 6일, 37년 프로야구 역사상 처음으로 프로야구 경기가 미세먼지로 취소하는 사례가 발생할 정도로 최근 미세먼지로 대표되는 대기오염의 위협이 심각 해지고 있다.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는 정책, 시민 참여형 차량 2부제, 2005년 이전 등록된 2.5t 이상 경유차량 운행 제한(아침 6시-밤9시)등 국내에서의 “비상 저감 조치”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들의 76%가 미세먼지의 주된 원인을 ‘중국 등 주변국의 영향’으로 보고 있다. ‘경유차 등 자동차 배기가스’를 꼽은 응답은 12%, ‘공장에서 배출되는 매연’이 5%, ‘석탄화력 발전소 등에서 배출’하는 가스에 3%, ‘공사장 먼지’를 꼽은 응답은 2%에 그쳤다, 국민 다수가 재난 요인을 중국 요인으로 이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저감조치만으로 국민들의 우려를 완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Q 미세먼지의 가장 큰 원인

(N=1,000, %)



03

4. 세월호 이후 달라질 대한민국을 위하여

① 현장 중심 대응체계

**현장조직(소방/경찰/의료)
신뢰도 높아
고위 정부조직(청와대,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대응 평가는 부정적**

“위계적 오피스 주도형”→“현장 조직 주도 대응 체제”로 전환 필요

재난 대응을 위해 자신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해야 할 각 행위자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지 물어본 결과 ‘소방/경찰’, ‘병원/의료기관’ 등 현장 조직이 재난 대응과정에서 효과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응답이 각각 62%, 50%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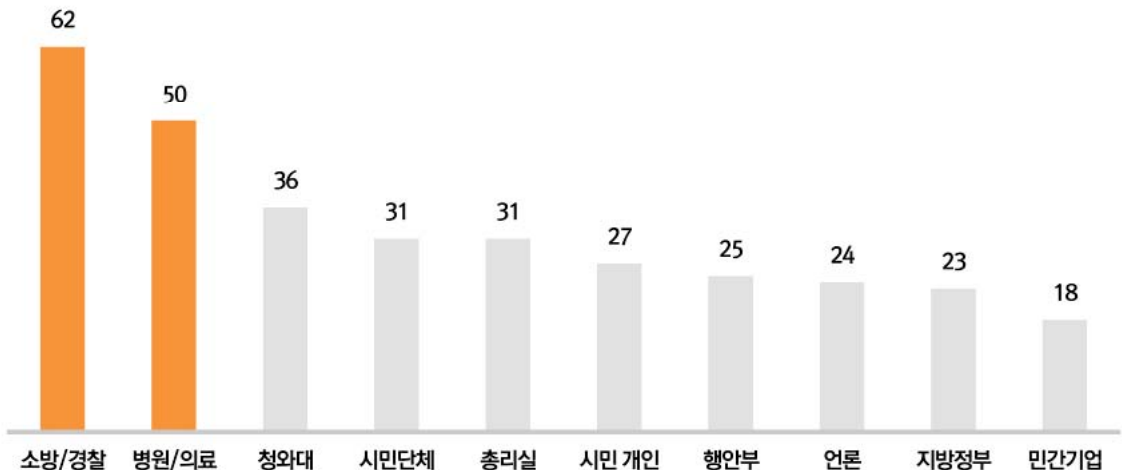
청와대, 국무총리실 같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기관이나, 행정안전부 및 자치단체와 같은 주무기관에 대해서는 제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해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청와대(36%), 국무총리실(31%), 행정안전부(25%) 등 중앙부처가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응답은 현장 조직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재난안전법〉상 중 중앙정부와 함께 재난관리의 중요한 책임과 역할을 부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은 23%로 가장 낮았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청와대나 정부 고위조직보다 현장조직에 대한 신뢰가 높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재난 발생 시 기존의 오피스 주도의 위계적 컨트롤 타워에서 현장조직 주도의 재난대응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국민 신뢰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Q 기관별 재난대응 평가: “효과적으로 대응”했다고 답한 비율

(N=1,000, %)



② 예방 대응역량 강화

정부 대응의 문제점

예방 42% > 대응 30% >
모든 단계 12% > 대비 10% >
복구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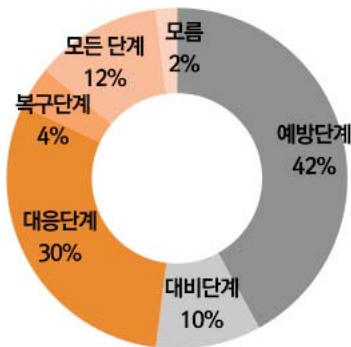
물적, 인적 자원 구축과 통합대응능력(부처간 협력, 민관협력 체제) 구축이 관건

정부의 재난 대응 프로세스는 재난 발생 전 예방(prevention), 재난 발생 직전의 대비(preparation), 재난 발생 시점의 대응(response), 재난 발생 후 복구(recovery) 라는 단계로 구분된다(Cabinet Office 2012; 정지범 외 2015). 역대 정부는 재난 대응은 물론 사전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정부의 재난관리 역할 중에서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단계를 선택하라는 질문에 대해 사전 예방단계를 선택한 응답이 42%, 대응 단계를 꼽은 응답이 30%였다. 대비단계를 선택한 응답은 10%, 복구 단계를 꼽은 4%에 그쳤다. 각각의 단계별로 평가해봐도 긍정적인 평가 비율이 예방/대비 단계에 대해 30%, 현장 대응단계에 대해 38%, 사후 복구 능력에 대해 41%로 나타났다. 역대 정부에서 대응중심 역할에서 예방중심 역할로 전환을 꾀했지만 현재까지는 예방에서도, 대응에서도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데 실패하고 있다.

대응 역량 강화에서 관건은 (1) 부족한 사고수습 자원(인적, 물적 사고수습 자원 확충 (2) 부처간, 민관 협력 대응체제 구축에 있다. 재난에 대한 사고 수습 인적 자원(인력, 전문성)과 물적 자원(장비, 물품 등)이 각각 잘 갖추어져 있다는 응답은 공히 26%에 불과했고 나머지 열 명 중 일곱 명은 부정적으로 답했다. 한편 정부의 통합대응력을 보여주는 재난 수습과정에서의 부처간 협력과, 민관 협력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이 각각 66%, 68%로 압도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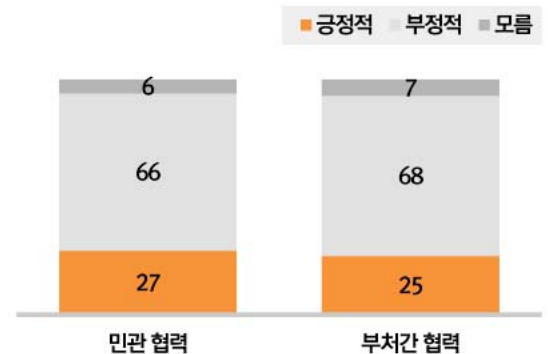
Q 정부 대응이 가장 미흡한 단계

(N=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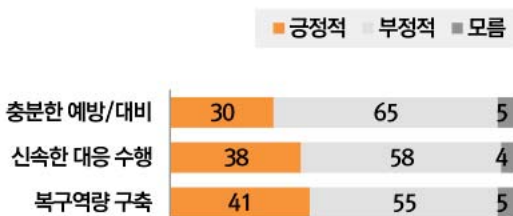
Q 정부의 통합대응능력 평가

(N=1,000, %)



Q 단계별 정부대응 평가

(각각 N=1,000, %)



Q 정부의 사고수습 역량 평가

(각각 N=1,000, %)



주) UK Cabinet Office, Civil Contingencies Act Enhancement Programme(2012).

③ 민간시민책임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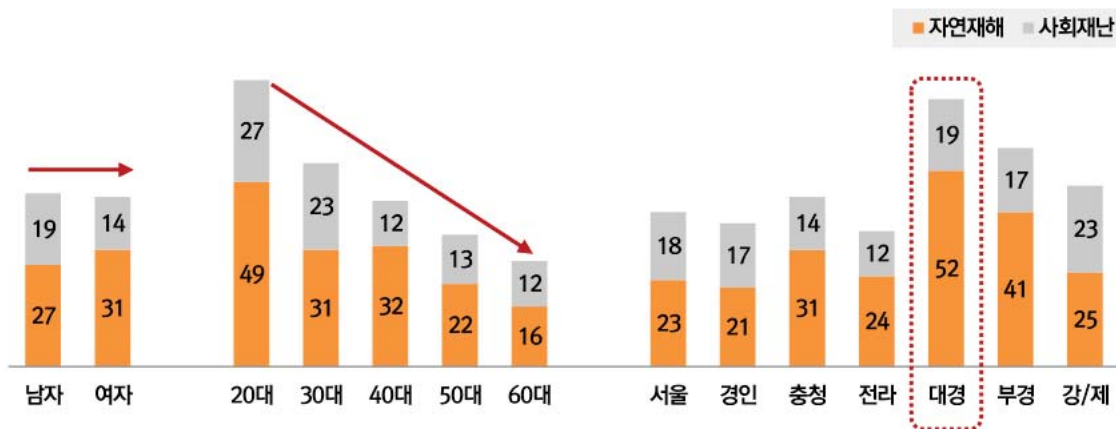
정부 역할에 부정적이나,
동시에 시민단체, 개인,
민간기업 역할에도 냉정

객관적 위험노출 집단과 심리적 위험 취약계층 간극 - 여성, 60대 심리적 불안 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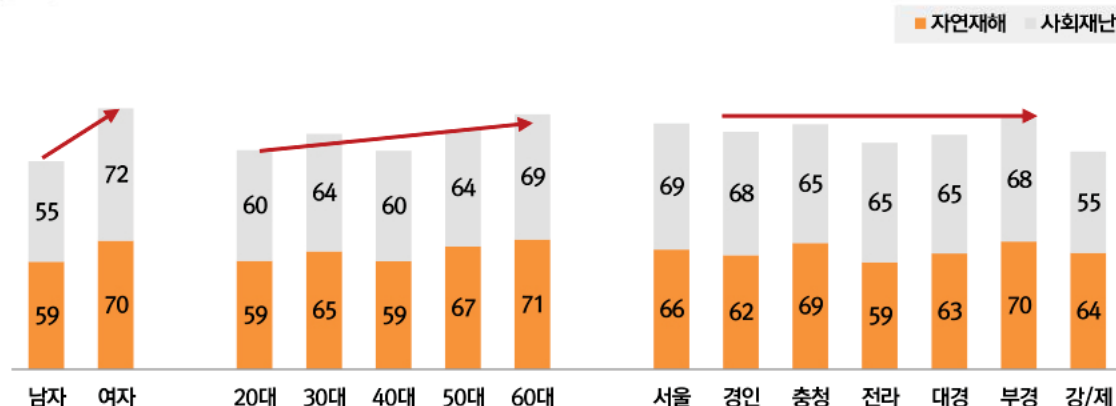
앞서 재난대응에 대한 기관별 평가에서 중앙정부 각 부처 및 지방정부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이었으나, 민간 시민 역량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다. 시민 단체(31%), 시민 개개인(27%), 언론(24%), 민간기업(18%)로 등 민간영역의 역할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열 명 중 3명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 이는 국민 스스로 정부의 책임만 전가하기보다는 민간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냉정한 자성의 필요성을 자각한 결과로 보인다.

지난 1년 간 1회 이상 자연재해와 사회재난 각각의 경험비율을 합하여 집단 별로 비교해보면 남녀 간 재해의 노출빈도에서는 큰 차이가, 세대별로는 젊은 세대에서, 지역별로는 최근 지진이 집중되었던 대구경북(경주, 포항 등), 원전이 포진해있는 부정 지역에서 실제 재난 경험도가 높았다. 반면, 자연재해(7), 사회재난(9)유형별로 위협을 느낀다는 비율의 평균을 합한 재해, 재난에 대한 불안감은 여성일수록, 나이는 세대일수록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객관적 위험노출집단과 심리적 취약계층이 불일치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집단별로 이원화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Q 지난 1년 간 재난/재해 노출도 : 1회 이상 경험 비율



Q 재난/재해 심리적 취약계층 평균



④ 시민 재난교육 개선

재난 시민교육 개선
필요성

재난 노출 큰 집단 교육에 집중, 향후 취약계층에 대상 교육 강화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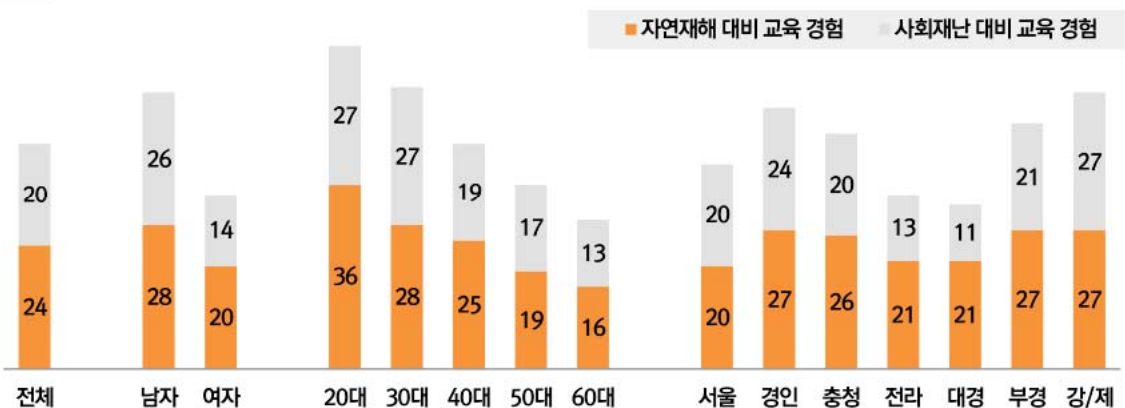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각각에 대비한 교육을 받아온 경험을 물어본 결과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4%가, 사회재난에 대해서는 20%만이 지난 1년 동안 1회 이상 관련 교육을 받아보았다고 답했다. 전체적으로 재난관련 시민교육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심리적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일수록, 5060세대일수록, 지역별로는 경인/충청, 부경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교육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남성과 2030세대가 직장 생활로 인한 활동성과 이동범위, 관련 정보 취득기회 등으로 재해, 재난에 노출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집단이 상대적으로 많은 교육기회를 가진 것은 그 자체로 부정적이라 할 수 없다. 상대적으로 직장에서의 재난 교육이 지역공동체 차원에서보다 효과적으로 관리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심리적 취약계층인 여성이나 5060세대의 경우 자연재해, 사회재난 관련 교육경험을 가진 응답자 비율이 20% 안팎에 머물고 있다는 점은 향후 개선되어야 할 대목이다. 사회생활 없이 거주지역에 정주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제공과 재난교육 강화방안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이상으로 세월호 4주기를 맞이하여 우리 사회의 재난 안전의식에 대한 조사결과를 정리해보았다. 갈수록 대형화, 복합화, 국제화되어 가는 재해,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대응능력은 물론 민-관 통합적 대응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세월호 이후” 달라진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한국사회의 각성이 대대적으로 확산되었지만, 4년이 지난 지금 국민 스스로 매긴 성적표로 보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재해에 여전히 취약하고 불안한 대응체제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카트리나 태풍,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빠르게 대형복합재난과 신개념 재난 대응을 위해 통합적인 대응체제를 갖춰나가는 미국, 일본과 달리 우리는 7시간 논란에만 머물러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달라진 대한민국으로 가야 할 길이 아직 멀어 보인다.

Q 지난 1년간 재난/재해 관련 교육 경험 비율(1회 이상)



안전재난인식조사연구팀
정한울(한국리서치여론분석 전문위원)
이동규(동아대 기업재난관리학과 교수)

여론속의
여輿論論

CHAPTER

04

조사개요

조사개요

구 분	내 용
모집단	• 전국의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표집틀	• 한국리서치 MS 패널(2017년 12월 기준 40만명)
표집방법	• 지역별, 성별, 연령별, 학력별, 직업별 기준 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 1,000명
표본오차	•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3.1\%$
조사방법	•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가중치 부여방식	•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림가중) (2018년 1월 행정자치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응답율	• 메일 발송 8,060명, 조사참여 1,350명, 조사완료 1,000명 (발송자 대비 12.4%, 참여자 대비 74.1%, 유효 참여자 대비 84.4%)
조사일시	• 2018년 3월 26일~30일
조사기관	• (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한국리서치 월간리포트

여론속의 여輿론論

40 YEARS Hankook Research

